“내년 석탄일 대사면” 자승 스님 공언 논란

8월 23일 제52차 원로회의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2차 원로회의에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대산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의 입장은 원로의원 명선 스님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의현 스님 등 1994년 종단개혁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명선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종단 화합을 위한 사면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종단 행정수반에게 직접 대사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도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이나 종헌 개정 등 어떤 방식으로든 멸빈자 대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100인대중공사 등을 통해 94년 개혁 당시 멸빈자 사면 등에 대한 종도 여론을 물은 바 있다. 8월 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도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스님이 참회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대중공사 위원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硏 5주년… ‘호국불교 개념 정립’ 등 과제

8월 26일 〈5주년 종합보고서〉 공식 배포

한국사회 현안을 불교적 시각서 통찰하기 위해 출범한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가 출범 5주년을 맞아 〈불교사회연구소 5주년 종합보고서(2011~2015)〉를 출간해 눈길을 끈다.

불사연은 이번 보고서서 그간 연구활동을 크게 3가지(종책 · 사회 · 호국불교) 분야로 나누고, 성과와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종책 연구, 집행 · 평가로 이어져야”

불사연은 종책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주제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 △사찰재정 투명성 △종단 재정 활성화 △수행체계 △타종교 현황 △종교공동체 △템플스테이 정책개발 등 14건 이상이다.

특히 2011년 출범 이후부터 매년 정기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제는 한국사회 및 종교계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3년 주기 정기조사(2011 · 2014년)와 간이조사(2012 · 2013 · 2015년) 총 5건이 진행됐다.

이러한 대국민여론조사는 데이터를 통해 종교 및 불교에 대한 사회적 추세를 확인하고, 종교가 나가아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단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사연은 종책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종책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불사연이 기획 ·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책수립-집행-평가’란 선순환 구조가 수립돼야 한단 지적이다.

불사연은 “종책연구는 기본적으로 종단에 백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연구의 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종책 담당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물을 통한 후속 연구를 진행, 전문 데이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불사연은 “연구보고서와 자료가 축적돼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련 부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사회연구… 대게 외주 ‘아쉬움’

불사연은 ‘불교 사회 연구’를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사회분야 연구서 각광을 나타냈다.

2015년 4.15세월호 참사 1주기 당시엔 추모 세미나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3대종교(불교 · 개신교 · 가톨릭) 역할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밖에도 현대사회 문제 및 갈등사안으로 대두된 △다문화 △3대 빈곤 △양극화 △성소수자 등 연구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11~2015 출범 후 활동 정리

종책 · 사회 · 호국불교 3분야 나눠

사업 개요 및 향후 과제 제시

“호국불교 개념 정립 미흡 아쉬움”

이 일련의 성과에 대해 불사연은 연구가 대부분 외주로 진행된단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불사연은 “외주 연구는 다량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단 측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구원 개인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며 “연구소 발전을 위해선 연구원마다 고유한 연구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인 연구원에게 3년 장기 연구 과제를 편성하고, 단기 연구 과제와 적절히 병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불사연은 “사회연구 주제는 각 이익집단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연구소는 종단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적 보폭을 유지해야 한다”며 “균형 유지에 실패할 경우 생산된 연구 결과물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 역사 바로 잡기 ‘앞장’

불사연은 불교 역사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먼저 초중고 교과서 검토사업 일환으로 △초등학교 전 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고등학교 한국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고등학교 동아시아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중동교과서 불교 미술 서술과 내용 등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2015년엔 불사연 산하 ‘교과서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윤리 · 역사 교과서의 왜곡되거나 미흡한 불교 관련 서술 내용을 개정토록 청원서를 제출, 교육부가 지침을 고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불사연은 ‘호국불교’의 개념 정립과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했다. 매년 2차례 호국불교와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1 · 2〉 및 자료집 〈조선시대 승장〉 등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불사연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호국불교’의 개념 및 범주가 합의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불사연은 “‘호국불교’ 개념 및 범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설득력 있는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며 “한국사에서 불교를 단순히 종교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공존, 주류 전통, 민중 삶의 일부로 본다면 호국불교 범위 또한 넓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호국불교 관련 학술연구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연국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북한불교에 대한 연구와 남북공동학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기협, “불교계 청탁 금지 정착 앞장 설 것”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불교기자협회가 법안 정착과 불교계 관행 변화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8월 26일 김영란법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취재지원 명목으로 이뤄져온 일부 관행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기협은 “협회 소속 언론인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어떤 청탁도 사적 이익을 위한 요구도 단호히 배격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기협 측은 이미 소속 언론인들이 언론인윤리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으며 취득 정보를 보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혜나 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지양해왔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탄자니아에 부처님 가르침 전하길

9월 5일 개교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 대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스님들(3000만원)과 서울 화계사(1000만원), 대성하이텍(2000만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각림, 성행, 제정, 등운, 지홍 스님(1000만원) 등은 개교를 앞둔 8월 30일과 31일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앙종회의원 스님, 화계사, 봉은사, 대성하이텍의 기금 전달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드 제3후보지… 내 지역만 아니면 되나?”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 지역 이기주의 ‘비판’

국방부가 첫 후보지로 지명한 성산포대가 아닌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가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유력해진 가운데, 지역 이기심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성주골프장과 불과 7km 떨어져 불똥이 튄 김천 지역민들이 ‘사드배치반대대책위’를 꾸리는가 하면, 성주 내에서도 제3후보지 배치에 대한 일부 찬성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은 8월 31일 본지와 통화서 이러한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지혜 스님은 “사드는 한반도 어느 지역에라도 배치되면 안 된다. 사드 배치 후보지가 거론될 때마다 그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성산포대가 첫 후보지로 대두됐을 땐 가만있던 김천 지역민들이 이제야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그러한 이기심은)사드가 내 지역에 배치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서 비롯된다. 내 이웃은 죽어도 되고, 내 가족만 살면 되냐”고 반문했다.

“성주군민은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 동참인원 늘어

2차 한반도 평화대법회 추진 시사

특히 지혜 스님은 일부 언론서 ‘성주군민들이 제3후보지는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주 군민들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단 것.

스님은 “오늘로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 째를 맞는데 동참인원은 더욱 많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군민들을 보고 있으면 경이롭기까지 하다”며 “군민들 의견이 분열되고 있단 얘기는 외부서 꾸며진 것이다. 성주 불교계 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제3후보지를 두고 정부와 국방부, 지자체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추후 상황에 따라 2차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 등 계획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이러한 성주군 사암연합회 의지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 법회 등 추후 활동에 동참하겠다”며 “지역 현안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드 배치는 모두가 함께 나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 원효종 공고문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향운(김윤철)스님**이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광고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가합359 총무원장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명시된 중요사항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 김윤철이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김윤철 주도로 2009. 6. 8. 총무원장에게 피고의 대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인 종헌 제37조를 의결하였고, 같은날 종회에서 **장영국(법명:혜봉)을 피고의 종정**으로 추대하였다.

의미 : 2009. 6. 8. 종회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의 종정추대를 위한 종회소집 허가를 받아 소집된 종회이고, 이 종회에서 장영국(법명 : 혜봉)을 종정으로 추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며, 이 날 정식 종정이 추대되었으므로 정식 종정의 추대를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종정 **김윤철의 임시종정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된 것입니다.**
정식종정이 추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임시종정이라고 광고하는 김윤철의 허위광고에 종도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윤철은 명백히 임시종정이 아닙니다.**

판결문 : 피고는...1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회의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출결의는 종회의 소집절차가 법인아닌 사단에서의 총회절차에 관한 일반법리 및 종회법 제17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현저하게 불공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윤철은 피고의 총무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바 없으므로... **무권한자인 김윤철에 의해 소집된 이 사건 종회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의미 : 제1심 법원은 1개월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회의원들에게 미리 소집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 8. 17.자 김윤철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종회결의 및 2013. 11. 28.자 손영채(우석)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종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의 구 종회법 제17조는 ‘종회는 개회 1개월 전에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단 종회의원 선거 후 첫 종회는 종정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종회의 소집권자를 규정하는 조항이지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누가 보아도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종단의 종회법을 그 문언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기에 종단에서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판결확정의 의미도 모르는 김윤철은 현대불교신문에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타 종단으로부터 일반상식도 모르는 종도가 있는 종단이라는 조롱을 면키 어렵게 하였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법률적 상식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도 없이 아직도 임시종정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김윤철의 행위를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종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대하며 법원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충현로 3길 4-1
● 연락처 : 054)743-0700 / FAX 054)741-9002
문의사항 있을 시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설재 정광
총무원장 우석